

노사가 함께 이루어낸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, 격차가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며 이행하겠습니다

1. 관련 기사

- 12.31.(수) 조선일보, “업종별 특성 무시한 채... 실근무 年 160시간 줄이겠다는 정부” 기사 관련

- 노무관리 인력이 없는 중소·영세 업체는 근로시간 기록 등을 위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.
- 일과 중 잠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처럼 근로와 휴식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는 만큼, 노사 간에 앞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.
- IT 업체나 스타트업은 ... (중략) ...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'벽'이 높아지면, 이들은 채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. 또 직업 특성상 근로와 근로 아닌 시간의 구분이 애매한 직종도 적지 않다.

2. 설명 내용

-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는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합의한 것임
-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및 노동계, 정부·전문가가 참여한 「실노동시간 단축로드맵 추진단(9.24.~12.24.)」은 총 25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,
 - * 소상공인연합회 2회 의견수렴(10.27., 12.3.)
 -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·관리가 노사 간 임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, 인재를 채용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,
 - 일부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정액급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의 오남용 방지에 합의하였음

- 노사정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, 컨설팅·재정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
 - 정부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개편 컨설팅('26년 100개소), 노동시간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('26년 200개소)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확대해 나갈 것임
- 아울러, 노사정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,
 - 구체적으로,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재검토, 특별연장근로 운영개선 및 AI 연구개발 분야 확대 검토 등에 합의하였음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서기관	어일천 (044-202-7617)

